

우째 이런 일이...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가축을 기르다 보면 분뇨가 나오게 마련이고, 이를 잘 활용하면 귀중한 자원이 되지만, 처리를 하지 않고 방류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해가 된다. 양축농가들이 분뇨처리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환경처가 지정한 업자에게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시공회사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는데도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 이상이라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영세규모(신규규모) 농가들이 법 기준에 맞도록 분뇨처리시설을 하여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법령이나 규칙을 간단히 개정하면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들여 시설한 것이 고물이 되고 만다.

우째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농산물에 대한 물가당국의 가격정책에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남으면 갈아엎고(무, 배추), 부족하면 수입한다(양파, 마늘 등)는 지극히 혜택보는 사람이 없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책때문이기도 하다. 돼지값이 오른다고 수입하고, 분뇨처리문제로 환경처에서는 조여오고, 새로운 질병들이(오제스키, PED, PRRS 등) 수입되어 확산되는데 대책은 없으니 우째 이런 일이 생겨 양축농가들을 주눅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값이 오르니 어차피 '97년에는 완전 개방될 것 미리 수입하는 게 어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6개월 후에는 종축이라고 이

름 붙여진 생축이 완전 수입개방됨으로써 가장 큰 피해가 예견되는 소 사육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제 또다시 소떼들이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는 천지창조 이래 두번째로 생태계를 변화시킬 소떼의 대이동이 일어날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식육소매업이 '96년 1월 1일부터 조기 개방됨으로써 이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고속도로가 개통하게 된다.

서울의 3개 육류 도매시장중의 하나인 협진의 부도에 이어 돼지고기 수출업체, 포장육 제조업체 등 대형 부도사건은 양축농가들을 당황하게 한다.

우째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인가?

지난 6월 14일은 축산농가에게는 매우 잔인한 날이었다. 과거 13년간 100여 회에 걸쳐 관계 요로에 사료 등 축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건의한 축산농가의 최대 숙원이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92년 14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사항이었으며, 국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고,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에서도 건의하였고, 각 정당에서도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66

양축농가들이 대선공약을 지키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데 부과하고, 헌법 123조나 34조 평등권
(경종농업에는 비과세)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에 왜 정부는 준법투쟁을 하지 않는가?

99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전체군주국가에서는 왕이 하고 싶어도 신하들이 부복하여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없드려서 버티면 왕도 어쩔 수 없어 어명을 거두면 신하들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하며 물러나는 TV연속 사극을 우리는 보아 왔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여론과 논리적으로도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60만 모든 양축농가에게 징세해서 몇 사람에게 분노처리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발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째 이런 일이 문민정부에서도 생긴단 말인가? 축산업계의 현안문제인 사료 등 생산자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나 축진기금 등 지원 자금의 금리, 융자기간과 가축 분뇨처리문제 등 대부분이 재무부와 환경처 등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고,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매우 적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대외협상 등에서도 생산자들과 대화라 되지 않아 UR협상에서부터 최종이행계획서 제출때까지, 더 나아가 그 이후에도 언론이 막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우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 세계의 농정 전환과 우리의 선택할 길이 우리나라 농업은 농민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가야 된다고 농정당국은 외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할 생산자조직의 개편문제는 안개속에 있으며, 위에서와 같이 현안문제들이 재무부, 경제기획원, 환경처 등 주무부처가 아닌 곳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하철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법을 지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정부가 준법투쟁을 하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화답도 신한국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우째 노조가 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투쟁방법이 되는가?

양축농가들이 대선공약을 지키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데 부과하고, 헌법 123조나 34조 평등권(경종농업에는 비과세)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에 왜 정부는 준법투쟁을 하지 않는가?

우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던 말인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창간의 기쁨과 지난 15년간을 되돌아 보고 개방화시대에 월간양돈의 역할을 생각하기에는 머리는 너무 무겁고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우째 이런 중병에 걸렸단 말인가? 